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이자발생분의 반납여부에 대한 질의 (2016.09.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중에

1. 특정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사업과
2. 단순하게 손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단순지원금이 있습니다.

위 1항의 경우에서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잔액 및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함께 해당 관청에 반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관청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 1항 및 2항에 대한 이해가 적법한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원신청 증가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2016.05.22.)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는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지방보조금의 종류에는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해당할 것이며, 국가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재정정책과 이원영, 02-2100-3520)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